

## 15차시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자치위원회에서 몰래 녹음을 했다면, 이것은 위법인가?]

### <학습목표>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비밀누설금지 의무의 내용과 범위 및 회의록 공개 및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하면서 녹음한 경우 그 녹음의 법적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 <사례>

#### 사건의 개요

K도에 소재한 W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 A는 2학년에 올라온 2011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반 친구인 B, C, D, E, F, G, H, I, J, K 등 10여 명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어깨를 툭툭 부딪치면서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라"는 폭언을 듣기도 하였고, 학교 내 매점에서 빵을 사오라거나 스타킹을 사오라고 강요받기도 하였다. A는 어쩔 수 없이 빵이나 스타킹을 사다주었으나 돈이 없을 때는 위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였고, 거절한 경우에는 화장실에 불려가 머리 등을 수차례 손바닥으로 맞기도 하였다.

2011년5월 경부터는1주일에 2회 정도씩 B, C, D, E, F, G가 A의 부모님이 없는 시간에 A의 집으로 찾아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서 A의 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1. 9월 경부터는 B, C, D, E, F, G, H, I, J, K 등 10여 명이 A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면서 매일 쉬는 시간 마다 찾아와 옆에 음식을 흘려놓고 주워 먹어보라고 이야기 하며, 방과 후에는 화장실이나 학교 근처 공터로 끌고가 집단적으로 A를 샌드백처럼 때려서 코피가 나거나 멍이 들게 하였다. A가 얼굴에 멍이 들고 오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집에서조차 불안해하

는 태도를 보이자 A의 부모님은 A를 설득하여 그동안 학교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에 알리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하여, W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W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 중에 자치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을지 불투명해지자, 불출석하는 위원에게 모두 위임장을 받도록 하면서, 교장 자신도 학생지도의 경험이 많으므로 자치위원으로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자치위원장에게 통보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때 B와 B의 아버지도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자치위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 내용을 다른 자치위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B 등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결정하자, A의 보호자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내용이 너무 가벼운 조치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사고소를 하였다.

학교장도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가?

자치위원들이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실제로 참석하는 자치위원보다 위임장을 제출한 자치위원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

B의 아버지가 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자치위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

B의 아버지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가?

B의 보호자가 자치위원들과의 대화를 공개한다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 되는가?

## 사건의 쟁점

학교장도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치위원들이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실제로 참석하는 자치위원보다 위임장을

제출한 자치위원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와 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자치위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및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자치위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공개한다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 되는지 문제된다.

### 사건의 결말

B 등이 A의 어깨를 툭툭 치고간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또한 빵셔틀은 중·고등학교에서 힘센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빵이나 담배 스타킹 등을 대신 사다주는 행위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로,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강요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

학교장은 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 자치위원들이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실제로 참석하는 자치위원보다 위임장을 제출한 자치위원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의사 정족수 요건이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침탈하는 것이므로 자치위원회 개최요건 자체를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의 아버지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치위원들과 대화한 내용을 자치위원들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의 비밀누설금지에 위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동법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의 아버지가 자치위원들과의 대화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보호자로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치위원과 대화한 것에 불과한 B의 아버지가 자치위원들의 발언 내용 등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치위원회에서의 대화내용을 근거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치위원이나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다.

## 전문가 의견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단순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 뿐 아니라 분쟁조정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까지를 모두 포함된다.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조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있지만, 직접적인 조사는 자치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학교폭력책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피해·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고 증인 및 물증을 확보하고,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조사된 내용을 수시로 정리하여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치위원이나 교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많은 개인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가급적 그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회의비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1.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 동영상 강의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본문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는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불법감청한 것이므로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자기와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인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 또는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 녹음한 경우, 그 비디오테이프 중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례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함)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 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

결).

따라서 사인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거나,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없는 사본으로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 240 판결).

#### (보충자료 - 진단서도 증거가 될 수 있는가? - 팝업으로 구성)

진단서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상병 등의 실정을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진단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교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진료부는 업무의 통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업무상의 신용 때문에 정확한 기재를 기대할 수 있고 기계적 기재로 인하여 허위기재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작성자를 일일이 소환하는 것이 부정당하다는 점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만 의사의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례는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진단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상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주간 또는 21일간 치료를 요함"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다. 수상일이란 상해를 입은 날이란 의미이며, 진단일이란 의사가 상처에 대해서 진단한 날을 의미한다.

## 2.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가? - 동영상 강의

각 급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장을 자치위원회에서 제외한 목적은 자치위원회와 학교의 장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의 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치위원 위촉권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누구를 위촉할 것인가는 학교의 장의 재량이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된 자치위원회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중립성·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되어야만 하므로 가급적이면 자치위원회의 ‘학교외 전문가 위원’의 구성 비율을 높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학교의 장이나 교사 등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자치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구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조치는 반드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학교의 교칙, 선도규정, 또는 학생생활지도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도위원회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다. 선도위원회와 자치위원회는 그 성격과 구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사건을 자치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에서도 자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폭력이 조직적 혹은 지속적으로 행해졌거나 피해사실이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건이 아니며, 피해가 크지 않게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원인과 더 이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아도 일단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조치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하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① 해당 학교의 교감, ②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④ 판사·검사·변호사, 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⑥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 자치위원회의 소집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당해 사안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의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이 가려져야만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공정한 중재가 가능하다.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조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있지만,



직접적인 조사는 자치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학교폭력책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피해·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고 증인 및 물증을 확보하고,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조사된 내용을 수시로 정리하여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한 경우 이러한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담기구의 조사와는 별도로 자치위원회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5.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과 자치위원의 위임장

자치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위임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외부위원의 위촉은 학교 구성원만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부족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매년 참석하기 힘들어 부득이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위임장을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만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위원의 위임장으로 회의 개의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의결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한 위원들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장이 아닌 출석위원 과반수가 실제로 출석한 후 심의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법적용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부위원에 대한 위임장의 인정 부분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의의 유효성을 부여한 것이지 위임장이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의결 권한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학교에서 5명의 위임장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면 자치위원회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의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6. 회의록 작성과 보존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

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단순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 뿐 아니라 분쟁조정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까지를 모두 포함된다. 즉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를 말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회의록이 작성된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각자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만약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들이 수정 및 삭제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 7. 비밀누설금지와 회의 비공개와 회의록 공개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치위원이나 교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많은 개인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가급적 그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회의비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현직 자치위원회 위원은 물론 전직 자치위원회 위원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자치위원회 서기나 전문상담교사, 교육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역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회의록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① 자치위원회 위원의 징계·보호 조치 관련 개별 발언, ②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 ③ 가해학생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주장한 위원의 발언, ④ 피해학생 및 목격한 학생의 진술은 비공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비밀이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데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사실을 말한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비밀을 누설한 것이 된다. 누설이란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고지하거나, 서류를 열람시키거나 모두 누설에 해당한다.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정리하기

선도위원회와 자치위원회는 그 성격과 구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사건을 자치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에서도 자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록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사인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거나,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없는 사본으로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